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4대 개혁 더 박차 가해야 한다”



조영철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7%로 하향 전망했고,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성장잠재력을 3~3.3%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요.**

“지금 세계 경제 전체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아 세계 경제 불황의 영향을 더 받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 정치·사회적 제약 때문에 일자리 창출도 부족하고, 경제성장이 더 더디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 잘 해소해나간다면 새로운 경제 활력을 어느 정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정치적 제약을 극복하고 필요한 개혁을 해낸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4~5년 내에 1~1.5%포인트 정도 올리는 것은 힘들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난 한 해 박근혜정부의 경제 성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국내외적으로 어려웠던 여건 속에서도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선전했다고 봅니다. 단지 폐기돼야 할 ‘국회선진화법’과 비협조적인 정치권 등의 여건 때문에 정부의 ‘4대 개혁’ 과제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경제를 살릴 새로운 성장동력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은 정부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업인들의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시장 기능에 의해 저절로 생겨납니다. 기업인들이 최대한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현재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정부에서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4대 구조 개혁(공공·노동·금융·교육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4대 구조개혁 분야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잡은 건 적절하고,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돼야 합니다.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특히 교육 개혁과 노동개혁이 중요한데, 노동개혁이 현재 잘 추진되고 있지 않아 걱정입니다.”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노동개혁이 왜 근로자와 기업에 함께 도움이 되는지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현재 임시직과 비정규직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산업구조가 바뀐 이유도 있지만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는 이유도 큼니다. 회사 입장에선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으면 정규직원을 덜 채용하고 비정규직을 쓰거나, 아예 외국에 공장을 짓게 됩니다. 특히 청년과 미숙련 근로자들의 취업 기회는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근로자와 우리 국민 모두입니다.”

선진국의 노동시장은 어떤가요.

“독일이 좋은 사례입니다. ‘라인 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독일도 1990년대 들어 ‘유럽의 병자’로 불릴 정도로 경제가 침체됐습니다. 주요 원인이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과도한 사회복지였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슈뢰더 총리가 노동시장과 복지제도의 일부를 개혁했습니다. 그는 노조를 지지 기반으로 하는 사회민주당 출신이었지만, 독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이 길밖에 없다고 믿은 것입니다. 기민당 메르켈 총리로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이 정책이 계속 추진된 결과 독일 경제가 되살아나 유럽에서 가장 잘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노동개혁의 전제조건이 있다면 뭘까요.

“근로자를 보호하되 일자리는 보호하지 말라”는 유명 경제학자의 경구가 요체입니다. 기존 일자리는 기술 발전에 따라 계속해서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사라져야 할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것은 근로자 자신과 기업, 경제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

“
기존 일자리는 기술 발전에 따라 계속해서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사라져야 할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것은 근로자 자신과 기업, 경제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는 일자리를 옮겨야 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훈련과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처럼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정치권이 안 움직이니까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겠다는 것인데,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싶습니다. 정치권과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직접 설득해서 국민이 필요한 개혁을 지지하고 정치권과 함께 이해당사자들에게 압력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소통 노력은 더 강화해야 합니다. 정치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표이고 여론 아닙니까.”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특별한 단기적 이유가 있다면요.

“개혁을 미루면 가장 큰 부담은 젊은이들에게 갑니다. 젊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하고 미숙련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으면 그들은 일자리를 얻기도 힘들고, 얻어도 비정규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해서라도 노동개혁은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교육개혁은 어떻습니까.

“금년 초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의 주요 화두가 된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우리에게 시사성이 아주 큰 대목이 있습니다. 현재의 초등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중소사업자 지위 강화, 재벌 지배구조 개선 등 13개 과제 완료 중소사업자 90% 이상 “거래 관행 개선” 평가

● 백화점에 식료품을 납품하는 공정의 씨. 공 씨는 지난해 백화점으로부터 판촉사원 인건비를 내라는 요구를 받고 당황스러웠다. 몇 달 전부터 판촉사원이 공 씨 회사의 직원들 대신 백화점 종업원으로 바뀌었는데 자신이 왜 이들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같은 백화점에 물건을 납품하는 이웃 업체 김 사장도 똑같은 요구를 받았으며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고심 끝에 공 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고발했고, 올 1월 ‘대규모 유통업법’이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백화점에 45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 씨와 김 사장은 설을 앞두고 대규모 판촉행사를 준비하며 백화점의 횡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됐다며 웃음 지었다.

‘을(乙)’의 힘이 세졌다.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덕분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가맹점주, 납품업체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개정을 모두 마쳤다. TV홈쇼핑사의 구두발주 및 판촉비용 전가행위, 대형마트의 납품업체 종업원 파견 강요행위 등이 개선됐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외식, 문구 분야의 부당 비용 전가 등 가맹점 불공정 행위도 줄었다. 중소기업은 지난 2년간 미지급 하도급 대금 3575억 원을 돌려받았다. 8000여 명의 중소기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소사업자 90% “거래 관행 개선됐다” 역대 정부 최초 지배구조 개선 평가도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은 경제민주화 정책의 또 다른 업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권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20개 법안 성과

완료 과제(13개)

- 부당 하도급 3배 손해배상제 확대(하도급법)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하도급법)
-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공정거래법 등)
-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신속사업조정제’ 도입(상생법)
- 불공정 하도급 특약 금지(하도급법)
- 가맹점주 권리 강화(가맹사업법)
-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율(공정거래법)
-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보유 한도 축소(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제 도입(표시광고법)
- 신규 순환출자 금지(공정거래법)
- 수급사업자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도급법)
-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대부업법)
- 대주주 적격성 심사 모든 금융업권으로 확대(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익 증진을 위한 핵심 내용들로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것을 실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정부가 엄두도 내지 못하던 신규 순환출자 및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해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과 편법 승계 차단의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순환출자 수(환상형 고리 수)는 2013년 4월 1일 9만7658개에서 2015년 12월 31일 94개로 사실상 차단됐고, 순환출자 보유 집단 수도 같은 기간 15개에서 8개로 줄었다고 밝혔다. 총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삼성, 현대차그룹의 합병에 대해선 1조 원이 넘는 주식을 처분하게 함으로써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재벌 규율의 장치로 작동했다고 풀이했다.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20개 가운데 13개가 완료된 가운데 공정위는 올해 ‘경제민주화 실천을 통한 중소기업 체감도 제고’를 3대 핵심 과제의 하나로 삼았다. 급성장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온라인 쇼핑몰도 감시 대상이다. **福** | 글 조영실 위클리 공감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월 18일 경기 성남시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열린 6개 부처 업무보고를 마친 뒤 인근 판교역 광장의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 운동’ 행사장을 방문해 서명하고 있다.

발상에서 개혁이 추진돼야 합니다.”

4대 개혁 외에 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모든 분야에 걸쳐 상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교육, 문화, 관광, 물류, 금융, 의료보건 등 각종 서비스산업 분야에 좋은 새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데 필요 이상의 규제가 많아요.”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당장은 국민에게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꼭 필요하다면 대국민 소통을 통해 해내야 합니다.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는 신념으로 개혁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경제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인기영합적인 정치적 수사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개혁이 왜 서민과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쉬운 말로 충분히 설명하는 정부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미진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흔히 ‘소통’ 하면 대통령의 소통만을 이야기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장관부터 각 부처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전 정부 차원의 대국민 소통 노력이 강화돼야 합니다.” **福**

사공일(77)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경제 석학이자 경제 관료의 ‘전설’이다. 전두환 정부에서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과 재무부 장관을 지낸 데 이어 노태우 정부 초대 재무부 장관을 지냈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외경제통상대사,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경제원로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을 역임했다. 지금도 1993년 민간연구원으로 설립한 세계경제연구원을 23년째 이끌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갖게 될 일자리 중 65%는 지금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새로운 일자리일 거라고 합니다. 이런 새로운 일자리에 맞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낼 인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교육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교육개혁의 하나로 자유허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끼’를 살려주는 건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더 높은 차원으로 진전시켜야 합니다. 지금 같은 산업화 시대의 교육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주입식 암기교육이 아닌 융합과 창의 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사무자동화와 로봇 기술의 발전 등으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실업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과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젠 대학 졸업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평생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도 포함해 교육체제, 교육 방법, 교육 내용 등 새로운

“
지금처럼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으면 일자리를 얻기도 힘들고,
언어도 비정규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해서라도
4대 개혁은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